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이률태림



그나마도 조그마했던 우리나라가, '단 일민족'이라고 자랑해오던 우리 한민족이, 돌로 쪼개 진지 65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슬픔을 동시에 안겨준 저 1945년의 8·15를 한국 현대사 일지에서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민족 분단이라는 불행의 씨앗은 이미 1592년~1599년의 임진왜란 때부터 잉태된 것이었다. 임란 때 왜군은 1594년 명나라와의 강화회담에서 "남부 4도"의 할양을 요구한 바 있었다.

300년 후 청국과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다시 전쟁을 벌였고(1894년 청일전쟁), 10년 후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또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다(1904년 러일전쟁).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일본에게 한반도 분할을 제안하나 이번에는 승리한 일본이 거부하면서 한반도는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은 이웃 나라들에 의한 한반도 분단론이 제기된 지 350년 만에 실제로 분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올해로 3세대 이상

을 분단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민족분단의 배경을 여러 가지 세계사적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란, 어느 날 지도상에 다 누군가가 줄 하나 긋는 것으로 끝나는

## 원심력의 시대서 구심력의 시대로

것이 아니다. 분단에 대한 역사적 해석만으로도 위안을 찾기에는 민족적 회색이 너무 큰 바 있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비룡출판사)에 의하면,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 우리 민족 희생자는 300만 명이라고 한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때의 우리 민족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에 접해본 바가 없지만, 최하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추산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 징용으로, 위안부로, 학도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이며, 해외로 망명한 사람들은 또 얼마인가? 1945년의 민족분단은 기필코 '6·25동란'을 낳았

데, 6·25 희생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아니 이제부터는 민족분단의 씨앗을 잉태시키고 그것을 방치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조선시대 중인, 서인의 봉당정치가 시작되고, '조보물 인쇄 발행한 민간인에 대한 고문 탄압(1577년)'으로 연로가 속 칠 필도 없이 막히고, 임진왜란이 터

진 선조 이후 조선 중후기를 한민족의 원심력시대라고 분류한다. 선조 스스로 자기 나라를 번영으로 자처하고,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라고 말하는 마당에 이차왕조가 민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와 '민주' 속에서 새로운 민족적 구심점을 찾은 최초의 시민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에서 민주주의의 싹을 보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 되려면, 개인이든 나라도 자주적 결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주'는 '민주'와 쌍생아일 수밖에 없다. 당시 일본

군과 운명을 건 한관 승부를 벌인 이유로 '자주'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이 '자주'와 '민주'를 향한 운동은 오늘날까지 100년 이상 계속되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비록 아직은 분단을 극복 못 했지만, 남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상층단계로 접어들어 하고 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내지는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만, 필자는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에너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위기는 '꽃샘 추위' 정도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이 지난 500년간의 원심력시대를 청산하고, 2000년대 인류 문명사에서 구심력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이다. 그 하나 됨도, '어떻게든'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물론 이 '하나 됨'을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종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당사자가 되고, 이웃 나라들이 '조력하는' 그러한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세종시 일방적 여론몰이 설득력 없다

정부가 오늘 광주에서 광주·전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가 나서는 이번 설명회는 2010년도 국정 운영방향과 국정 현안사항에 대한 전달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제 및 향후 과제'가 중점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지난 주 서울과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서 열린 설명회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국정 설명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집중 홍보하는 '국정 홍보회'로 변질됐다는 말이다. 국정 설명회란 말 그대로 국정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런데도 가장 미묘한 세종시 수정안을 공무원들에게 들이밀어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물론 세종시 문제가 국정의 최대 현

안인 것만은 분명하며 정부의 입장도 이해된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닌가.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고위 공무원들을 2시간 이상 불러놓는 것은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국정 설명회도 이런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벌써 이전에서 "국정 설명회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불리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방적 홍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번 광주 설명회에 광주시청, 전남도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등 모두 640명이 참석해 2시간 이상 매달려야 한다는 한심할 따름이다. 일방적 여론몰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통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후진국이다.

###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확산 막아야

소·돼지 등의 전염병인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의 젓소사육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후 지금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젓소를 진료한 수의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인근 목장을 순회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구제역 발생 목장을 다녀온 사료 차량을 다른 목장에 출입하도록 방치할 정도로 방역 체계가 허술했다.

가축 전염병은 방역망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특히 구제역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기진단으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남 도내 가축시장 13곳이 무기한 폐쇄된 것도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에는 치명타가 된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발

생한 구제역으로 무려 1조원대에 달하는 작·간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벌써부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가능한 인원과 방제장비를 총동원해 구제역이 더 이상 추가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이 확인된 가축의 도축과 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방적 차원에서 구제역 의심 소의 살처분도 머뭇거리서는 안될 것이다.

구제역 뿐만 아니라 조류 독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방역 매뉴얼에 허점이 없는지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기회에 가축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구제역은 인수(人獸) 공통질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률,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김완진



전세계 197개 국가 원수들은 2000년을 맞이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지구상의 굶주림 없는 세상을 열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 가지가 아니라 불평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여러 지원국의 도움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도움을 1조 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수많은 이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개인들의 나눔입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 평범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빈곤은 '나랏님'이 앞장서야 하고, 빈

###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은 일제 36년의 탈환으로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년간의 긴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군사독재와 부패와 가난만이 존재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같이 긴 수화를 이루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참전국들의 국가원조를 비롯한 160여개의 많은 서구 민간단체들이 원조금을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와 버려진 전쟁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질병의 문제, 청소년 및 교육의 문제들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곤은 밥을 세 끼 먹는 사람이면 반 끼씩 나눠먹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주변의 빈곤은 물론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민족, 더불어 사는 전통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개인기발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장·광주지부장>

◇ 굿네이버스=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UN으로부터 NGO최상위 자위인 포괄적협약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다.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내 44개지부 및 해외 24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꾸준한 홍보·문화교류로 한식 세계화 나서야

최근 뉴스에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가야'라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조리장이 나와 타국에서 한식을 조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털어냈다.

먼저, 한국식 재료 공급이 수월하지 않아 한식의 필수 양념인 한국산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되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식에 대한 홍보가 미약해 일식이나 중식에 비해 선호도가 크게 뒤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식당 타이틀에 썬뽕, 자장면 등 중화요리도 함께 하는 곳이 대부분이 아니라

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현지에서 한식 행사를 자주 해야 한다. 또 우수업체를 선정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즉 한식의 필수 재료를 싸게 즉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각 나라에 전담 한식 홍보팀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요리학교를 상대로 한식을 꾸준히 홍보하고 정기적인 문화 교류를 나누면 한식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영성·광주시 동구 대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기고

차재준



존 롤스는 1971년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 밝혔다. 롤스가 밝힌 정의의 원칙의 하나가 이후 사회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규범처럼 인정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도 불평등을 조장하는 듯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원칙을 해석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더 많은

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부상으로 받은 사업비로 전담 차량 5대를 구입해 각 구청에 배당, 보다 신속한 공동체계를 구축하였고, 고혈압·당뇨 환자들을 위한 당화혈색소 측정기를 확보해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명을 증원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보다 높

###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위하여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다 이혼이나 한 부모가족, 미혼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 부양기능이 사회적 기능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안정취업에 따른 부모계층의 생계활동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져 노인부양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대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실질적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과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상담, 정보 제공 등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책이다. 정부와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각 구청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적극적 방식이다.

우리는 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난해, 2008년도 정부합

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방문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면서 매년 정원을 늘려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49명에서 4명을 늘린데 이어 올해에도 서비스 전담인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특히 서비스 대상으로 1순위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 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의 건강 위험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장비 및 인력 증강과 함께 올해도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자가관리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서비스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광주를 앞당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광주시 건강증진과장>

### 비만 부추기는 패스트푸드, 적절한 규제 필요

얼마 전 타이완 정부가 세계 최초로 패스트푸드와 술 등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식품에 세금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정크푸드(쓰레기 음식)'라고 하여 학생이든 성인인든 경계심을 갖게 하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이처럼 건강에 나쁜 식품

들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해 건강한 식습관을 권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비만인구가 점차 늘어난다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정부처럼 패스트푸드에 세금 붙이는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청소년들의 비만을 부추기는 생활습관을 감안하여 패스트푸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김선경·광주시 북구 용봉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제 1 부 2200-641	체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제 2 부 2200-62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